

## 평화공존 5원칙 60주년: 중국과 미얀마는 형제인가?

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앞서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 발표 60주년을 기념하여 안사리 (Mohammad Hamid Ansari) 인도 부통령, 떼잉세인(Thein Sein) 미얀마 대통령을 초대하여 회담을 개최했다. 이 회담은 시 주석 취임 이후 해당 3개국 정상이 공동의제로 한자리에 모인 최초이면서 이례적인 최고위급 회담이다.

해당 3개국은 평화공존 5원칙의 기치 아래 마약, 인신매매, 밀매 등 초국가적인 범죄와 테러리즘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회담에 참석한 각 정상의 속내는 동상이몽에 가까웠다.

중국은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국 관계가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미얀마 신정부의 행동은 중국의 기대와 달랐다. 경제보다 정치적 자유화, 반중 정서의 현실정치 반영 등을 통해 중국의 속국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했다. 나아가 군부정권에 비판적이던 서방세계와 외교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제재 조치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정권에 대한 국제적 정통성도 확보했다.

변화하는 미얀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중국은 2011년 이후 급속히 냉각된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다. 특히 2014년은 미얀마가 아세안 의장국에 취임한 해인바, 중국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확산되는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온건한 정책을 제시하여 미얀마를 설득하고 '중국기회론'을 다시금 지피고자 한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인도도 미얀마를 가교(架橋)로 설정하고, 동진(東進) 속도를 낼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략적으로 미얀마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할 경우 인도는 동남아와 남아시아를 횡단하는 경제회랑을 완성할 수 있고, 중국에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잠재적 패권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

## 목 차

1. 배경과 목적: 평화공존 5원칙의 성립
2. 미얀마와 중국관계의 발전과 변화: 피를 나는 형제
3. 미얀마의 약진과 중국의 제자리걸음
4. 3국 정상급 회담의 의의와 평가
  - 가. 주요 회담 내용
  - 나. 각국의 속내
  - 다. 변화한 환경과 평화공존 5원칙
5. 평가와 전망: 한국에 주는 시사점
  - 가. 3자 회담의 의의
  - 나. 한국에 주는 시사점

## 1. 배경과 목적: 평화공존 5원칙의 성립

- 전후 국민국가 출범과 함께 인도, 미얀마는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비동맹운동의 주도 국가였음.
  - 서구 식민화를 자발적으로 치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비동맹중립외교노선의 필요성 확산
  - 중국과 인도는 미국과 소련의 강대국 사이에서 상호 갈등할 경우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확산
  - 지정학적으로 미얀마는 중국과 인도 등 강대국에 끼어 있는 약소국으로 국가의 생존을 위해 중립적 외교 전략이 필요했음.
- 평화공존 5원칙의 성립 배경과 내용
  - 인도와 중국 간 티베트 영유권 문제 해결 협상(1953.12~1954.4) 당시 중국 저우언라이(周恩來) 주석이 제안함.
  - “중국과 인도의 티베트 지역에 대한 무역과 교섭 협정”으로 합의, 이후 이 원칙은 양국 외교정책의 기초로 채택됨.
  - 이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중국과 미얀마도 외교관계 기초로 본 원칙을 채택함.
  - 영토와 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불간섭, 평등과 상호 이익, 평화 공존 등을 원칙의 주요 내용으로 함.
- 평화공존 5원칙의 부침(浮沈)
  - 중국과 인도는 카슈미르 지역과 관련한 영토분쟁으로 1962년 전쟁을 치렀고, 지난 4월에도 동 지역의 실질통제선과 관련하여 약 3주간 각군이 대치했음.
  - 중국과 미얀마는 국민당 잔당의 미얀마 유입과 아편 재배, 1950년대 미얀마 동북부지역 영토 분쟁, 1967년 문화혁명 여파로 인한 미얀마 내란 발생, 미얀마 소수종족 분리운동에 따른 내전 발생과 중국의 무관심 등 초국적 의제가 산재함.
  - 인도와 미얀마는 냉전기까지 평화공존 5원칙을 유지했으나 1988년 미얀마 신군부 집권 이후 1992년 인도가 동방정책을 선택하기까지 적대적 관계 유지
- 위와 같은 배경에서 이 글은 변화한 환경 속에서 평화공존 5원칙의 가치와 모순을 분석하고, 미얀마와 중국 관계를 중심으로 각 국가가 취하고 있는 외교 전략을 분석하고자 함. 또한 거대 국가 속에서 미얀마의 지정학적 가치가 강화되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2. 미얀마와 중국관계의 발전과 변화: 피를 나눈 형제

- 미얀마 정신 및 물질문명의 절반은 중국임.
  - 미얀마는 중국 유교사상을 수용하지 않았으나 왕조시기부터 인도와 함께 중국의 영향권하에서 물질과 정신문명을 발전시켜 왔음.
  -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중국의 침략으로 왕조가 멸망하는 사례(1287)가 발생했을 정도로 미얀마는 중국을 부담스런 존재로 인식해 왔음.
  - 17~19세기에도 중국의 왕조 교체, 왕위 찬탈전 등 내부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미얀마 동북부지역으로 유민 발생 및 국지전의 원인이 되었음.
- 빠옥포(Pauk Phaw) 관계의 설립
  - 미얀마는 제3세계 국가 중 마오쩌둥 정권을 최초로 인정한 국가임.
  - 저우언라이 주석의 미얀마 방문(1954) 당시 양자관계는 ‘형제, 혈맹’을 의미하는 빠옥포로 정의됐고, 이후 이 용어는 두 국가 간 관계를 설명하는 고유명사로 고착됨.
  - 1978년 중국이 공식적으로 공산혁명 수출을 중단하기까지 중국은 ‘당대 당 전략’으로 미얀마 내 공산당을 지원함.
  - 미얀마는 비동맹중립노선을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채택하여 중국과 직접적인 물리적 마찰을 피해 왔음.
- 등거리 외교에서 밀월관계로 발전
  - 1988년 이전까지 미얀마는 중국이 협조 또는 지지를 구하는 국제적 사안에 중립적 원칙에 근거한 등거리 외교를 고수함.
  - 미얀마 신군부 집권(1988.9.18) 이후 미국, 유럽연합 등 서방세계가 민주화 지원, 인권 탄압을 명분으로 대 미얀마 제재 시행
  -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정통성을 상실한 미얀마 신군부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정권 퇴진 압력을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시도함.
  -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하여 미얀마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한편, 미얀마와 독점적 경제교류를 통해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환경을 구축함.
  - 나아가 중국은 미얀마를 교두보로 활용하여 남서실크로드의 부활과 인도양에서 한반도 일대 태평양을 잇는 해상권 장악을 목표로 하는 군사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

**냉전기 중 중국,  
인도, 미얀마는  
영토와 주권에 대한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불간섭,  
평등과 상호이익,  
평화공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공존 5원칙을  
채택...**

**미얀마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과  
연동하여 중립노선의  
토대 위에  
헤징전략을 통해  
외교적 국익을  
제고하려는 입장으로  
선회**

- 새로운 관계의 모색
  - 2007년 1월, 미얀마 제재안이 유엔안보리에서 중국의 반대로 무산된 뒤 왕광야(王光亞) 중국 대사는 미얀마 내정을 직접 언급했고, 2월에도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이 민주화 조치를 요구하는 등 양자 관계의 이상기류가 포착됨.
  - 2008년 미얀마 반체제 인사들이 중국에서 회합을 하자 미얀마는 중국으로 향하는 가스관 및 송유관 공사를 중단하는 태업을 벌임.
  - 2009년, 2010년 미얀마 군부 지도자의 중국 방문 당시, 중국은 양국 간 경제협력 이외에도 미얀마가 제안한 국경지역 소수종족 소탕 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미얀마 군부의 태도 변화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함.
  - 미얀마 신정부의 출범 배경(줄고, JPI 정책포럼 2012-1 참조)에서도 드러났듯이 미얀마 국민뿐 아니라 군부 실세까지 중국 종속구도에 대한 우려와 반중국인 정서가 확산되었음.
  - 중국의 연성외교, 정부 대 정부 간 대화 채널, 군사적·경제적 지렛대로만 인식하는 중국의 대 미얀마 전략은 미얀마의 반발을 야기했음.
  
- 재설정되는 양자 관계
  - 2010년 총선 이전, 중국은 자국의 전철을 밟아 미얀마가 경제발전을 통하여 실적에 의한 정통성(performance legitimacy)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미얀마 군부에게 조언함.
  - 위의 경우 중국은 양자 간 경제교류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며, 미얀마의 중국 의존도는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측함.
  - 예상과 달리 미얀마 신정부는 정치범 석방, 인권 개선, 자유화 조치 등 정치 분야의 개혁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경제제재 해제를 위해 서방세계와 관계 개선을 시도함.
  -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과 연동하여 미얀마는 중립노선의 토대 위에 헤징전략을 통해 외교적 국익을 제고하려는 입장으로 선회함.
  - 군사정부 시기와 달리 미얀마는 중국기업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투자환경을 철회하고, 밋송(Myitsone)댐 건설 중단, 렛빠마웅(Letpataung) 구리광산 투자 조건 재설정 등 국민들의 반중 감정을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반영함.
  - 2012/13년 기준, 중국의 대 미얀마 직접투자(FDI)는 4억 700만 달러로 1년 전(82억 7천만 달러)에 비해 급감했고, 미얀마 내 주요 투자 입찰전에서 중국기업은 단 한 건도 낙찰받지 못함.

### 3. 미얀마의 약진과 중국의 제자리걸음

- 미얀마는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성공적인 개혁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 중국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다자화하고, 자유화 조치를 통해 서방세계의 지도자 방문과 지속적인 지지를 유도함.
  - 중국은 정부 대 정부 관계에만 천착하여 미얀마의 급진적 변화에 능동적 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양자 관계는 일정 수준 후퇴함.
  - 미얀마의 개혁은 특히 아세안의 지지를 이끌어 2014년 미얀마가 아세안 의장국으로 선택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 2012년 캄보디아 사례처럼 중국의 영향력하에서는 동남아 약소국이 아세안 의장국 고유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됨.
  
- 아세안 의장국 역할을 무난히 수행 중인 미얀마
  - 지난 50년간 국제사회에서 은둔한 경력으로 인해 국제정서에 밝지 못하고, 장기간 군부집권으로 인해 국제행사 경험 전무, 행정력 부재 등으로 의장국 역할을 소화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었음.
  - 2011년 미얀마와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자 관계를 격상하는 등 여전히 미얀마를 중국의 위성국가로 취급하는 경향도 관측됨.
  - 위와 같은 우려에도 지난 5월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담(Summit)에서 미얀마는 의장국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함으로써 아세안의 지지를 유도함.
  -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남중국해 영토분쟁지역의 긴장고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함.
  - 이외에도 대화를 원칙으로 하는 태국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주의 원칙 존중, 한반도 비핵화 지지 재확인을 통한 긴장완화 노력, 중국-일본 간 동중국해 분쟁, 역내 사이버범죄, 인신 밀매, 기후변화, 식량 및 에너지 안보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거침.
  
-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
  - 중국은 남중국해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아세안 차원의 다자적 해결보다 분쟁 당사국의 양자 관계로 해결하려는 원안을 고수함.
  - 상기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중국은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정상회담 이전 미얀마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됨.
  -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중국 이외 국가(군)와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미얀마는 아세안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중국 이외 국가(군)와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미얀마는 영토문제에 있어서 아세안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아세안 내 입지를 강화**

회담에서는 3국은  
평화공존 5원칙의  
고수를 바탕으로 한  
아태지역의 안보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건축”의  
필요성 역설

무용론을 불식시키고, 동시에 아세안 내 입지를 강화함.

- 미얀마가 미국의 아시아 복귀를 지렛대로 활용하자 중국의 고립은 가중화되는 추세임.
- 중국 일각에서는 대 미얀마 진출 및 외교전략 수정을 위한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나 중단된 밋송담 건설 재개 주장 등 큰 틀에서 정경분리 및 경제우선원칙을 고수함.
- 중국은 가스관 및 송유관 안전 문제로 미얀마 서부 해상지역 해군 주둔 또는 접안 등 미얀마와 군사협력을 시도했으나, 이는 미얀마의 대중 반발 심리를 강화함.

#### 4. 3국 정상급 회담의 의의와 평가

##### 가. 주요 회담 내용

- 평화공존 5원칙의 고수를 바탕으로 한 아태지역의 안보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건축”의 필요성 역설함.
  - 시진핑(習近平) 주석, 무커지(Pranab Mukherjee) 인도 대통령, 떼잉썬인 미얀마 대통령은 6월 28일 축전 교환을 통해 평화공존 5원칙 제정 60주년을 축하하며 3국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한 우호교류의 해로 지정함.
  - 시 주석은 미국과 이라크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외부의 개입으로 인해 한 국가가 혼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중국은 국력이 강해진다고 하더라도 결코 패권(hegemony)을 지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함.
  - 시 주석은 패권이나 군사화는 중국인의 유전자가 아니라고 언급하며, 중국은 중국의 이익, 아시아와 나아가 세계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인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함.
  - 국제사회의 공존을 위해 중국은 모든 국가가 개방, 투명, 평등한 질서 속에서 아태지역의 안보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새로운 건축이라고 명명함.
- 경제협력을 통한 통합경제권 구축 필요
  -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안사리 인도 부통령, 떼잉썬인 미얀마 대통령과 각각 양자회담을 통해, 평화공존 5원칙의 토대 위에 BCIM 경제회랑과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부활 등 경제현안 협력, 평화적 협상을 통한 국경분쟁의 해결책 모색 등을 논의함.
  - 리 총리는 미얀마와 가스관, 광업개발, 항구 건설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을 순조롭게 시행 및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함.

- 인도와는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신흥경제국으로서 발전전략과 거대한 협력의 잠재성을 공유하고, 국경문제에 대한 원활한 해결을 희망함.

※ BCIM(Bangladesh, China, India, Myanmar) 경제회랑: 1999년 8월, 중국 윈난 성 성도 쿤밍에서 개최된 4개국 간 트랙 2 회담으로 해당 4개국 간 무역, 관광, 기술 및 인적 교류를 포함한 경제교류와 마약과 무기 밀매, 불법 이주 등 초국적 범죄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BCIM 포럼의 경제분야 협력 의제이다. 각국의 싱크탱크 중심으로 연례 회담을 개최하여 경제협력 강화, 현안에 대한 원활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이 포럼을 통해 남서실�크로드의 부활을 꿈꾼다.



## 나. 각국의 속내

### ○ 중국

- 미국과의 갈등,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어가는 형국을 돌파하기 위해 인도와 아세안 차원의 협력 및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해석됨.
-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위협론을 인지하며 아세안 차원의 집단적 대응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중국은 불순한 의도가 없다는 외교정책을 전시함.
- 미얀마 신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함에 따라 중국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이 소멸될 위기에 봉착했고, 미국과 미얀마의 관계가 급진전되자 중국의 위기의식은 고취됨.
- 일례로 5월 28일, 미 육사 졸업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버마(미얀마)가 성공하면 미국은 총 한 번 쏘지 않고 새 파트너를 얻게 된다.”고 하여 미국의 아시아전략에서 미얀마를 중요한 행위자로 지목함.
- 미얀마의 친미화는 일국 차원을 넘어 중국이 미얀마를 교두보로 설정하여 추진해 온 ‘중국산 진주목걸이 전략’, 인도양에서 한반도까지 잇는 해상권 장악 전략 등 군사 및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함.
- 중국은 아세안 의장국인 미얀마를 선제적으로 포섭하는 차원에서 하반기 실시될 아세안정상회담, 아세안+3 정상회담에서 미얀마의 유화적인

*미얀마의 친미화로  
중국이 미얀마를  
교두보로 설정하여  
추진해 온 ‘중국산  
진주목걸이 전략’,  
인도양에서  
한반도까지 잇는  
해상권 장악 전략  
등에 타격이 불가피*

**미얀마는 최근****소원해진 중국과의****양자관계를 회복하는****차원에서 현안에****대한 포괄적 논의와****대응 방안을****강구함으로써****혈맹관계의 연속성을****과시**

행동을 유도하고 있음.

- 국가 대 국가 관계로는 미얀마와 경제교류 회복,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간 관계 복원을 희망함.

## ○ 인도

- 지난 6월 초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방인의 연장선 상에서 중국과 긴장관계 청산 및 경제 교류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금번 회담은 연말 시 주석의 방인을 대비한 외교장으로 활용함.
- 모디(Narendra Modi) 신임 총리는 구라자트 주지사 재임 당시부터 중국의 경제성장을 주목한 인물로, 중국의 발전 모델을 채택하여 기술, 규모, 속도 면에서 경제발전을 견인할 전망이다.
- 동방정책 계승을 위해 미얀마와 지속적인 관계 증진 및 경제적 협력 필요성 증대
- 중국 및 미얀마와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력 증대를 도모하여 중국과 경쟁관계 형성 및 동아시아세계에 영향력 확대

## ○ 미얀마

- 전통적으로 비동맹중립외교를 표방하는 외교정책상 주권 보장과 상호 불가침원칙은 국가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본 원칙을 옹호함.
- 중국을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 최우선 국가로 선택해 왔으나 최근 소원해진 양자관계를 일정 수준 회복하는 차원에서 현안에 대한 포괄적 논의와 대응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혈맹관계의 연속성을 전시함.
- 각종 밀매, 인신매매, 소수종족 무장반군 등 중국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공조체제를 유도하여 내부적으로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고 외부적으로 중국의 대 미얀마 태도 변화를 유도함.
- 중국, 인도 등 주변 강대국과의 동등한 외교관계를 과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국제 협상력을 제고하고자 함. 특히 미국의 대 미얀마 지원과 협력을 유도하는 전시효과를 지향함.
- 인도와는 남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의지를 재확인시키고, 미얀마가 중국의 영향력하에 들지 않도록 인도의 견제와 균형을 유도함.

**다. 변화한 환경과 평화공존 5원칙**

## ○ 평화공존 5원칙과 21세기 동아시아 질서

- 본 원칙은 미국과 소련연방 등 양극체제를 돌파하기 위한 제3세계의 자구책으로 21세기 지역질서와 상충되는 면모가 다수 발견됨.
- 중국은 타국과 충돌 금지, 국제적 공조 추구, 평화공존 5원칙 고수, 낮은 수준의 정치 협력 등 대외정책을 추진해 왔음. 해양안보 측면에서

향후 50년을 목표로 인도양과 태평양 연안의 해상권 장악을 목표로 설정함.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에서 소위 ‘중국기회론’을 제공하며 우호 관계를 형성했으나 동남아는 중국의 행태를 기회와 위기 등 동전의 양면으로 인식함.
- ‘G2 시대’를 맞아 인도와 미얀마는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상황과 조건에 따른 편승 및 균형전략으로 국익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됨.

○ 평화공존 5원칙의 수정 필요성

- 영토와 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 중국과 인도의 영토분쟁 지속 및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도 부재, 미얀마 내전으로 인한 난민 발생 및 주변국(중국, 태국)으로 유입
- 상호 불가침: 중국과 대륙부동남아가 추진 중인 메콩광역권(GMS) 개발이 중국의 지배적인 위치에서 진행되는 등 중국과 동남아 개도국 간 경제교류는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음.
- 상호 불간섭: 이론적으로 3국 간 원칙을 고수할 수 있지만, 미얀마의 자유화 조치 및 인권 강화, 향후 체제변동 가능성에 따른 중국의 대응 전략 미비.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국가로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국제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평등과 상호 이익: 강성 및 연성권력 차원에서 해당 3개국은 비교 자체가 불가함. 해당 3국은 경제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으나 정경분리가 항상 주효하지는 않음.
- 평화공존: 공동안보, 테러리즘 관리,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법치화 등은 현실주의적 국제관계에서 달성할 수 없는 미완의 과제이며, 평화공존을 위해 주권이나 국익 일부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평화공존 5원칙은  
냉전 중  
미소양극체제를  
돌파하기 위한  
제3세계의  
자구책이었으나  
21세기 지역질서와는  
상충되는 면모가  
다수 발견되어...*

## 5. 평가와 전망: 한국에 주는 시사점

### 가. 3자 회담의 의의

- 지역 내 중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회담
  - 평화공존 5원칙을 매개로 정상급 회담을 개최했으나 중국은 지역 내에서 초강대국 지위를 입증했음.
  - 중국은 동남아와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경제회랑계획의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해양안보전략을 구체화하고자 함.
  - 시 주석 취임 이후 중국은 활발한 대외전략을 통해 국제적 입지를 공고히

**평화공존 5원칙 발표****60주년 기념****정상회담은 중국의****역내 위상을****확인하고, 미얀마의****가치를 재확인하며,****향후 과제를 확인할 수****있었던 기회**

하고, 잠재적으로 아태지역을 주도할 역량을 배양하고 있음.

- 중국의 대외관계는 ‘경찰국가’와 같은 미국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중국만의 연성전략을 전시함.

## ○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중국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회담

- 미국의 대 동남아 약진은 중국의 상대적 퇴보를 의미하므로, 중국은 동남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상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필요함.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동남아국가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캄보디아의 사례처럼 경제적 지원을 불모로 동남아 내 영향력을 행사해 옴.
- 중국위협론이 가시화되자 아세안 내 친중국가는 감소했고, 이에 따른 중국의 대 동남아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일본과의 영토분쟁에서도 상호 물리력을 전시함에 따라 동남아국가의 안보딜레마 자극, 이에 따른 아세안 차원의 집단적 대응 필요성 제기

## ○ 미얀마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었던 회담

- 1990년대 이후 중국은 미얀마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았다고 항변해 왔으나, 정치·경제적으로 미얀마는 중국의 속국화되는 추세였음.
- 개혁개방 이후 미얀마는 중국과 등거리 외교로 전환함에 따라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이익은 축소되었음. 이는 미얀마가 중국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존재했다는 점을 의미함.
- 중국, 인도에 비해 미얀마는 약소국이지만 본 회담에서 대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는 사실은 미얀마가 두 국가의 외교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 ○ 향후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던 회담

- 하반기 개최 예정인 아세안정상회담, 아세안+3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세안 의장국인 미얀마의 지지를 유도할 것으로 관측됨.
- 위와 관련하여 이번이 없는 한 미얀마는 아세안 회원국의 의견을 존중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미얀마와 관계 개선을 위해 현지 진출전략의 수정, 미얀마 야당과의 교류 등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겠지만, 평화공존 5원칙은 두 국가 관계 개선에 일정 수준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최근 미국이 미얀마와의 경제교류를 포함하여 군사적 연대까지 모색하는 가운데, 미국의 영향력을 상쇄 또는 쇠퇴시켜야만 지역 내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

- 연말 방인이 예상되는 시 주석은 인도와 국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평화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함.

## 나.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중국의 전략을 직시하고, 한국은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음.
  - 금년 들어 중국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외교의 공을 들이는 추세로 보이며, 평화공존 5원칙 발표 60주년 기념 회담과 시 주석의 방한, 시 주석의 연내 인도 방문 등도 중국의 아시아 외교 연장선상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중국이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를 통해 외교적 지지를 획득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음.
  - 중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한국의 이탈을 통한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특히 한국과 함께 대 일본 압박정책을 통해 일본과의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나아가 아시아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함.
  - 한국은 중국과 북한,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등 중국이 최근 갈등 관계를 겪은 일련의 국가들과 전략적 선택을 통해 국익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동남아를 경제협력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외교 스펙트럼의 확장이 필요함.
  - 대 동남아 지원 규모를 참고했을 때, 한국은 중국, 일본을 초월할 수 없으므로 경제 분야 이외의 협력의제를 설정하고 관계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음.
  - 베트남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했고, 필리핀도 미국의 안보벨트에 적극 동참하는 등 동아시아 안보정세의 급변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이 한반도 평화, 북핵문제, 테러리즘 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표명하는 것처럼 한국도 동북아 외교전략보다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적 스펙트럼이 필요함.
  - 아세안 관련 회담에서 한·중·일 3국의 의제에 관심을 두기보다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폭넓은 시각과 배려가 필요함.
  - 동남아는 정치적으로 중국, 경제적으로 일본의 패권 장악에 잠재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를 모색하는바 한국이 모범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음.

**우리는 동남아를  
경제협력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외교의  
스펙트럼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 미얀마의 지정학적 가치는 한반도의 그것과 매우 유사함.
  - 미얀마를 교두보로 아시아 재진입 전략을 완성하려는 미국, 해양으로 뻗어 나가려는 중국, 동남아를 넘어 동아시아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인도 등 강대국의 이권은 미얀마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
  - 헤징전략으로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여 국익을 제고하려는 미얀마의 외교적 노력은 미·중·일 틈바구니에 갇힌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에 적지 않은 교훈을 주고 있음.
  - 적성국가로 분류되던 미얀마의 변화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표본이 될 수 있으나 미얀마와 북한의 내부 사정은 상이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미얀마는 그들의 변화와 북한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두 국가를 비교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성향이 강함.

#### ❖ 저자 약력

##### ■ 장준영(張准榮)

現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한국외대에서 미얀마 군부의 정권유지 전략에 관한 연구로 국제관계학 박사를 취득함(2009). 미얀마 정치변동과 국가-사회관계, 동남아 국제관계 등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출판하였음.

기획 및 감수: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윤미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mailto: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